

기술과 철학이 만나기 위한 조건..

강력한 공학자 이익단체

글 | 손화철 _ 한동대학교 전임강사 whachuls@hotmail.com

3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공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워크숍이 있다. 지난 11월 초에는 런던에서 개최되었는데, 기술철학의 통찰을 공학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다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발표 허락 통지 후 불참의 뜻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니, 오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까 한다며 심사자들의 평을 보내왔다. 한 명은 논문초록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공학자들에게 설계 단계에서 해당 기술이 미칠 광범위한 영향들까지 고려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학자들의 사회적 지위

이러한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철학자가 공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현실을 모르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해질 수 있다. 기술철학 전공자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편으로는 기술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수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공학자의 형편에 대한 적나라한 이해에 바탕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기술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들 중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앞서 소개한 적이 있는 하이데거나 엘월 같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비판을 받고, 핀버그나 위너처럼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이들은 기술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너

무 가볍게 본다는 반론에 직면한다. 공학자들에게는 이들 모두가 그냥 말만 많고 생산성은 제로인 철학자들의 헛소리roman 들렸을 수도 있겠다. 지난 글에서 제기한 공학설계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이미 엄청난 책임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공학자들에게는 그리 설득력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철학자더러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요구다. 나아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라는 창의적 설계가 공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공학설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불변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철학자의 제안을 다시 한 번 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공학자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시민사회의 합의로 결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학자들이 그것을 공학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공학설계는 이렇게 외부의 시각을 공학내부에서 소화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 공학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

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공학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공학자의 사회적 지위이다. 공학자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 고용되어 있으며, 집단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이는 흔히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나 법률가와 비교되는데,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자격증을 발급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의사나 법률가가 가진 전문성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진 공학자라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공계 기피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동일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다르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또 다른 결과는 공학자가 사회 전체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이 의사나 변호사가 느끼는 것보다 덜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공학자는 세상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형성하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법률가나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듯하다.

공학자들에게도 강력한 이익단체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금의 상황이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문직의 정의가 유효한지를 생각해 보자.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의사와 법률가와 같은 전통적 전문직 종사자들도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로펌이나 종합병원이 우수한 법률가와 의사들을 끌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만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통적 기준을 따라 개인 개업이 가능한 직종을 전문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의 정의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비야흐로 전통적 전문직이 공학의 영역에서와 비슷한 형태도 분업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학자들이 그들에 비해 더 낮은 자존감이나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물론, 기존의 구별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의사나 법률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자격증에 의해 상당히 균등한 구성원을 가진다. 이에 반해 공학자들의 수는 많고 그 수준도 대학 학부를 갓 졸업한 경우로부터 공학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모습의 유사성만 가지고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학자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기여는 공학자들 자신들에 의해서나 사회 일반에서나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물론 외부인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용기를 내어 공학자들의 강력한 이익단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본다. 피고용인일 수밖에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고 책임감과 윤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학자 단체가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고용한 국가나 기업, 연구소와는 별도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익단체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쟁이나 성급한 개발에 내몰리지 않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의 이익집단화는 양날의 칼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회적 이익보다 해악을 끼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학자들의 상황은 이러한 모험을 시도할 만한 경우이다.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높은 윤리성과 깊은 책임감은 자존감이 선행되어야 나올 수 있다. 또 함께 일해야 하는 공학의 특성상, 책임감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빼아픈 과거를 되돌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기술부가 한꺼번에 없어질 때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듯한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었다. 우리 삶의 틀과 의미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공학자들이 그만큼의 사회적 인정을堂堂하게 요구하게 되기를, 또 그 역할의 수행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아울러 짊어지기를 바래본다. 이것은 공학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 공학자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다. ㉓

〈편집자 주〉 '기술과 철학의 만남'은 이번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